

교육행정 통합...‘K-교육특별시’ 정책 실행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100 일

‘교육행정 통합’ 모델...4대 핵심과제 정책 실행 나서 K-민주주의 교육→수업 혁신→지역 정주→현장 밀착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교육행정 통합 모델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 100일을 맞아 4대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책 실행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7일 ‘K-민주주의 교육’, ‘교실 혁신’, ‘지역 정주’, ‘현장 밀착 행정’을 4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정책의 큰 틀은 ‘기반 조성→본질 회복→미래 확장→행정 혁신’으로 이어진다. 지역의 민주주의 자산을 교육에 접목하고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한편, 지역 전략산업과 교육을 연계해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K-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미래 역량으로 연결한다. 2029년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학생 주도형 ‘1929→2029, 우리가 있는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30년 5·18 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 AI·디지털 기반 체험형 교육공간인 ‘K-민주주의 전당’을 조성해 전국과 세계 청소년이 찾는 민주교육 거점으로 육성한다. 헌법교과서를 제작·보급해 학생들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 교



육도 강화한다. 교실과 수업을 중심으로 두는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조 종합대책 추진단을 10월부터 운영하고, 2027년에는 전담기구와 권역별 교육활동보조센터를 신설한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현장 초기 대응부터 밀착 지원하고 24시간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2027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0명의 선도교원을 양성한다. 2027년 3월 개원 예정인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은 학교급·교과별 평가자료와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지역 전략산업과 교육을 연결해 ‘배움→

일자리→정주’로 이어지는 교육체제도 구축한다.

AI·반도체 분야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광주과학고에 이어 GIST 부설 영재학교와 KENTECH 부설 영재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AI·모빌리티, 에너지·반도체, 우주항공·신소재 등 산업 분야와 연계한 권역별 과학고 체제도 추진한다.

직업계고 재구조화도 진행한다. 목포공업고와 해남공업고를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로, 순천미래과학고를 반도체 특화과학고로 개편하고 2029년 개교를 목표로 (가칭) 광주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을 추진한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교육용 Mini-FAB 반도체 공동실습센터를 구축해 학생들이 실제 반도체 공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순천효산고와 목포여자상업고를 시작으로 K-컬처, AI 미래형 서비스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도 확대한다.

지역에 청년과 기업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추진해 국제학교와 외국어 전용마을 등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교실과 지능형 과학실 등 미래형 교육환경을 확대한다.

이전기업 임직원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입학 및 고입 자격 기준 완화와 함께 맞벌이·연구직·교대근무 가정을 위한 365일 안심돌봄방도 구축한다.

행정체계는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본청은 정책 기획과 조정, 집행 권한과 지원 기능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학교 밀착형 체제로 조직을 재설계한다.

10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미래형 조직체계를 마련한다. 원거리 발령 교직원에 대한 이주지원비·주거지원비·교통비 지원과 인사상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토한다.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를 강화한다.

노후 광주정시는 예정대로 광산구 신창동 부지로 이전한다. 새 청사는 AI·반도체 등 지역 미래산업 및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해 학생 체험과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100일은 두 교육청의 행정조직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집중 적응 기간이었다”며 “통합의 본질적인 목적은 행정기구를 합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지역을 살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통합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교실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정책을 본격 추진해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자라 세계로 나아가는 K-교육특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안도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은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원내대표단이 주관한 명사 초청 특강에서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과 전남광주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안도길 “전남광주, 실질적 통합으로 경제 도약 이끌어야”

광주특별시의회 특강...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육성 제시 지역 갈등 극복·성장 기반 확충 강조...국비·일자리 확보 협력

안도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은 7일 “전남과 광주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로 결속해야 한다”며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원내대표단이 주관한 명사 초청 특강에서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과 전남광주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특강은 특별시당과 시의회가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통합 이후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전남광주가 직면한 핵심 과제로 ‘통합과 도약’을 꼽았다. 행정구역 합치는 데서 나아가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의 성장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40년 만에 전남과 광주가 물리적 통합을 이뤄냈지만,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진정한 하나로 결속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눈발에 첫발자국을 조심해서 내딛듯 우리가 결속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의 인적 기반과 전남의 공간적 자원을 결합한 통합의 의미도 짚었다. 안 위

원장은 “사람이 많은 광주와 넓은 공간이 있는 전남이 합쳐져 비로소 제대로 된 선수와 운동장을 모두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의 성장이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와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기술·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과제를 제시했다. ‘하나 된 전남광주, 대한민국 경제 1번지’를 비전으로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청년의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과 자본시장 구조개혁 등 국가 차원의 경제정책 전환 방향도 함께 다뤘다.

안 위원장은 지역 정책의 방향을 ‘균형

발전’에서 ‘균형성장’과 ‘지역주도성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이 직접 성장 동력을 만들고 국가 경제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시의회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행사를 주관한 강문성 원내대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일 지역주도성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 원내대표는 “통합의 성공적 안착과 일자리 창출, 국비 확보 등 산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과 시장, 지방의회가 하나의 팀으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시의회 의장 측사와 강 원내대표 인사말, 안 위원장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경제·산업 정책과 의회의 역할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구제역 방역 살처분 ‘과학적·선별체계’ 전환을”

문금주 의원 강조...최근 44건 구제역 9804두 살처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구제역 방역을 일률적인 살처분 중심에서 과학적·정밀·선별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제역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총 44건이 발생했으며, 9804두가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과도한 살처분은 국가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방역 인력의 업무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개체와 우수 종축까지 일괄 살처분할 경우 농가의 재기 기반과 축산자원 손실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제역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현장 피해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백신 접종이 정착되고 NSP(비조단백질)와 SP(구조단백질)를 구분하는 정밀진단 기술도 발전한 만큼 과학적 방역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방역체계 개선방안으로 △양



성 개체 중심의 선별 살처분 △NSP·SP 정밀검사에 기반한 차등 방역 △비발생 농가의 조건부 조기 출하 허용 등을 제안했다.

실제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해 양성 개체 중심으로 살처분하고, 농장별 감염 위험도와 백신 항체 형성률 등을 반영해 방역조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역대 내 비발생 농가도 정밀검사와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도축장을 통한 조건부 조기 출하를 허용해 2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구제역 방역의 목표는 예방적 살처분 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면서 축산농가와 산업 기반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효과와 현장 피해를 평가하고, 구제역 SOP(긴급행동지침)와 세부 살처분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광주 ‘남빛 기본돌봄’ 컨트롤타워 필요”

고경애 시의원, 27개 시·군·구·민간 연계 한계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320만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남빛 기본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역 단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보건·의료·주거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돌봄 사업의 특성상 현재 신설된 4급 과장급 조직만으로는 27개 시·군·구와 민간기관까지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경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사진)은 최근 열린 윤남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빛 기본돌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부시장 직속의 광역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현재 시정에 신설된 통합돌봄과를 중심으로는 복지·보건·의료·주거 등 다부서 업무와 27개 시·군·구, 민간 돌봄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돌봄이 행정조직 내부의 단일 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역별 전달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광역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통합 과정에서 의 조직 정비도 과제로 제시됐다.



고 의원은 존속 법인과 주사무소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빛 기본돌봄의 실행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에서 축적된 통합돌봄 경험이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제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공무원과 전문인력이 4~5년간 현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기에 가능했다”며 “통합 과정에서 숙련된 인력이 분산되고 업무만 전담으로 확대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 기본돌봄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간 돌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전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남빛 기본돌봄의 성패는 단순히 하나의 복지사업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복지·보건·의료·주거 분야와 있는 별도의 광역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통합 과정에서 의 조직 정비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원이 “서남권 반도체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하자”

광주 팹 건설과 함께 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해야 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을 소부장 산업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사진)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광주 반도체 생산거점과 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의 산업·에너지·생활 기반을 연결하는 ‘서남권 반도체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메모리 팹 건설만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생산시설 조성과 함께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짚으며 “정부가 클러스터 지정 범위를 정할 때 ‘무안 반도체 광역생태권’을 소부장 산업거점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 25일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무안을 소부장공공광·수출·물류의 전진기지로서 육성하는 구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목포·영암·해남·신안에 반도체 연관 산업을 유치·육성하고, 연구·교육시설과 에너지·생활 기반을 연계해 서남권을 ‘권역 단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역할로는 소무안의 국가산단 추진 및 국제공항 활성화 △신안의 해상풍력 중심 에너지 산업 육성 △목포

의 대양산단·백련동 등 산업임지 활용과 교통·물류 기반 연계, 대학·폴리텍·특성화고를 통한 인재양성 및 광주 여건 개선 △영암의 기존 산업 기반 활성화 △해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과의 연계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더불어 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을 아우르는 무안반도 광역생활권 중심의 ‘서남권 반도체 에너지 산업벨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런 계획들이 같이 가줘야 광주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